

신용협동조합법

<목 차>

- 1-1. 임원선거 관련 선관위 위탁 근거 마련
- 1-2.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
5. 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화
6.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
7.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리화
8. 중앙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
9. 중앙회에 대한 예탁금 등 대위변제청구권 소멸시효 단축

금융위원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1-1. 임원선거 관련 선관위 위탁 근거 마련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계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김 준
	담당부서/과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정 완 규		연락처	02-2156-9859
	과장	신 진 창		이메일	zero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-		(규제 아님)	
	이해관계자	신용협동조합 신협중앙회	908개 1개	관계기관 협의, 임법예고 등	이견 없음
5. 규제 존속기한	- 규제아님, 존속기한 없음				
6. 구분	- 규제아님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함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□ **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**

- 규제아님 : 동 내용은 신탁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27조의3(선거관리의 위탁) 조합은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**규제의 필요성**

가. **현황 및 문제점**

-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거가 점차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민원이 폭증하고, 조합원 매수 등 부당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는 조합(중앙회 포함)은 이에 타 상호금융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할 필요
- 현행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라목 및 제4조제2호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 선거시에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으나, 타 상호금융기관처럼 명확한 근거가 아님
 - 위 법률에 따라 위탁을 한다면, 위탁할 때 마다 개별 조합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 판단에 맡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

나. **정부 개입의 필요성**

- 현행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라목 및 제4조제2호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 선거시에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으나, 타 상호금융기관처럼 명확한 근거가 아님
 - 위 법률에 따라 위탁을 한다면, 위탁할 때 마다 개별 조합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 판단에 맡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☐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거의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함으로써
공정한 선거 사무를 통해 조합원간의 내분 및 혼탁선거 예
방

2. 대안의 발굴검토 : 해당사항 없음
3.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: 해당사항 없음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: 해당사항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1-2.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김 준
	담당부서과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정 완 규		연락처	02-2156-9859
	과장	신 진 창		이메일	zero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-		(규제 아님)	
	이해관계자	신용협동조합 등·수·축협	908개 ?개	관계기관 협의, 입법예고 등	이견 없음
5. 규제 존속기한	- 규제아님, 존속기한 없음				
6. 구분	- 규제아님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신흥법상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규제아님 : 실험법상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39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신용사업 가. ~ 나. (생략) 다. 내국환 라. ~ 아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제39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신용사업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. ~ 아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**환전상** 또는 **외국환취급기관**으로 등록하여 **환전업**을 영위하고 있으며,
 - ‘16.3.2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업무 중 ① **거주자**와의 **외국통화 표시 예금·대출업무**, ② **비거주자와의 예금·대출업무**도 추가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나
 - 실험법상 조합의 사업범위에는 **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** 할 필요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조합 사업의 종류는 엄격한 법정 사항으로 법 개정 필요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조합의 사업의 종류에 외국환을 추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해 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, 실험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

2. 대안의 발굴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3.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: 해당사항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5.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화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김 준
	담당부서(과)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정 완 규		연락처	02-2156-9859
	과장	신 진 창		이메일	zero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-		(규제 아님)	
	이해관계자	신용협동조합	908개	관계기관 협의, 입법예고 등	이견 없음
5. 규제 존속기한	- 규제아님, 존속기한 없음				
6. 구분	- 규제아님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조합간 합병 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칭은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, “이 전등기” 대신 명칭의 “변경등기”만으로도 권리행사가 가 능하도록 근거를 규정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규제아님 : 동 내용은 신설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 명의간주규정을 신설하
여 실험을 지원하는 내용임
- 조합간 합병 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칭은 존속하거
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, “이전등기” 대신 **명칭의 “변경등기”만
으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** 근거를 규정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합병과 분할) ① ~ ③ (생략) <신 설>	제55조(합병과 분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空簿)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 의 명칭(名義)은 존속하거나 설립 된 조합의 명의로 본다.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조합 간 합병 후 피합병 조합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존속조합 등이 별도의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근저당권 등 제반권리를 행사하나, 이 경우 많은 등기비용, 인력 및 시간이 소요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실한 신탁의 합병이 활발하므로, 신탁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명의간주규정을 규정할 필요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근저당권 등의 이전등기 대신에 명의의 변경등기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여, 소요되는 비용, 인력 및 시간을 절감을 통해 합병조합의 건전성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

2. 대안의 발굴 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3.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: 해당사항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6.중앙회 지배구조 개선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의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김 준
	담당부서(과)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정 완 규		연락처	02-2156-9859
	과장	신 진 창		이메일	zero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, 제71조의2, 제71조의3, 제72조, 제72조의2, 제73조, 제75조, 제76조의4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-		(규제 아님)	
	이해관계자	신용협동조합중앙회	1개	관계기관 협의, 입법예고 등	이견 없음
5. 규제 존속기한	- 규제아님, 존속기한 없음				
6. 구분	- 규제아님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‘전무이사’를 법제화 하여 중앙회장의 업무 대부분을 전무 이사에게 위임하고 중앙회장은 이사회·총회 의장 등 제한 적 역할 수행				
	- 각 상임임원에게 경영목표 설정,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부여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-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상임임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				
	-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규제 아님
- 1) 지배구조는 단순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며, 여러 이해 관계인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매커니즘으로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강화 및 완화할 수 있는 규제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는 없음
- 2) 특히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목적으로 신탁중앙회장이 비상임 전환되었으나, 전담업무의 조정이나 신규 임원의 선임 등이 법정화 되지 않는 등 법개정 과정에서의 일부 누락 사항이 있었던 바,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추가 법개정 사항임
- 3) 전무이사의 선임, 전담업무 및 권한의 일부 조정 등을 규제로 볼 수 없음
- '전무이사'를 법제화 하여 중앙회장의 업무 대부분을 전무이사에게 위임하고 중앙회장은 이사회·총회 의장 등 제한적 역할 수행
- 각 상임임원에게 경영목표 설정,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부여
-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상임임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
-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71조(임원의 정수 등)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,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·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	제71조(임원의 정수 등) ① ----- ----- ----- 대표이사 1명, 검사·감독이사 1명 및 전무이사 ---

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.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·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. ③ (생략)	----- --. ② ----- 대표이사, 검사·감독이사 및 전무이사-----.
제71조의2(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)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,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·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 <신설>	제71조의2(임원의 선임 등) ① ----- ----- ----- 대표이사, 검사·감독이사 및 전무이사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③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, 검사·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(이하 "전문이사"라 한다)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.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⑤ ----- 검사·감독이사, 전무이사 및 조합----- ----- ----- -----.
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⑦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⑥ 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	⑥ 중앙회장,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, 검사·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 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, 제28조, 제31조제2 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.
제71조의3(인사추천위원회) ① 중 양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 추천위원회를 둔다.	제71조의3(인사추천위원회) ① -- ----- 제71조의2제5항----- -----, 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2조(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)	제72조(회장의 대표권 등) ① --- ----- -----, ----- 제72조의2제1항----- ----- -----
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 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신용·공제 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	--.
②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, 그 업무에 관하여 중 양회를 대표한다.	②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 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, 제72 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 사·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전

1.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과 그 부대사업	담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각 검 사·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소 관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신 설>	1. 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 진을 위한 활동 및 그 대외활 동
2.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 영목표의 설정, 사업계획 및 자 금계획의 수립	2. 제7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 사회의 의결 사항 중 신용·공 제사업 대표이사, 검사·감독이 사 및 전무이사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
③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 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정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 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3. 제1호 및 제2호----- ----- -----
④ 검사·감독이사는 제78조제	<삭 제>
	<삭 제>

	<p><u>회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</u></p> <p>나.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<u>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</u></p> <p>다.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<u>검사·감독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</u></p> <p>2. 제7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제1호와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</p> <p>3.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,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</p> <p>④ <u>신용·공제사업대표이사, 검사·감독이사 및 전무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제73조(직원)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	<p>제73조(직원) -----</p> <p>-----, ----- 제72조의2제1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따라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.	-----
제75조(이사회 결의사항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	-----
1. ~ 7. (생략)	-----
<신설>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(생략)	8. 정관에 따라 실시하는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, 검사·감독이사 및 전무이사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
② ~ ④ (생략)	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제76조의4(대리인의 선임) 중앙회장 및 신용·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검사·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	제76조의4(대리인의 선임) -----

	- 검사·감독이사, 전무이사 또는 직원 -----

	-----.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었으나 업무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‘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제고’라는 비상임으로의 전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, 상임임원의 직무대행 관련 규정 미비로 상임임원 결위 시 중앙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우려 상존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신탁중앙회의 지배구조는 엄격한 법정 사항으로 각 임원별 업무의 범위 등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전문경영인인 전무이사를 선임하여 현재 중앙회장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중앙회의 책임경영 확대
- 전무이사를 포함한 상임임원에게 경영목표의 설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경영 취지 확보
- 이사회는 상임임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게 함
- 상임임원이 결위한 경우에 대비하여 직무대행의 순서를 규정함으로써 중앙회 업무의 안전성 확보

- 2. 대안의 발굴검토 : 해당사항 없음
- 3.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: 해당사항 없음
- 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: 해당사항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7.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리화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김 준
	담당부서/과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정 완 규		연락처	02-2156-9859
	과장	신 진 창		이메일	zero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-		(규제 아님)	
	이해관계자	신용협동조합중앙회	1개	관계기관 협의, 입법예고 등	이견 없음
5. 규제 존속기한	- 규제아님, 존속기한 없음				
6. 구분	- 규제아님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신용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 모두 조합에 배분하여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함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규제 아님
- 1) 중앙회는 조합이 예치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실적에 따라 이익(손실 제외)을 배분할 수 있도록 실험법이 개정되었으나, 이는 '중앙회의 손실 방지'라는 애초의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해 재개정을 추진하는 사항
- *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가 손실을 부담하고,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에 분배
- 2) 애초의 개정취지인 '중앙회의 손실 방지'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(실적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조합에 모두 분배)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차원이 아님
- 신용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 모두 조합에 배분하여,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함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78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~ ⑤ (생략)	제78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.	⑥ ----- ----- ----- 이익 또는 손실-----.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치받아 운영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실적상품은 조합에게 이익은 배분하되, 손실을 배분할 수 없음
- ☐ 중앙회는 수수료 수익만을 취함으로써 중앙회의 손실확대를 방지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최초 도입취지에 어긋남
- ☐ 신용예탁금을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회가 손실 부담하므로, 손실 발생시 중앙회 건전성 훼손 가능성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회가 손실 전액을 부담하여 중앙회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손실 또한 이익과 마찬가지로 조합에 분배하여 공정한 손익분배를 하고, 중앙회의 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☐ 손익의 공정한 분배 유도 및 중앙회 누적결손 재발 예방
- ☐ 조합이 실적상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부담하여, 중앙회는 실적상품을 적절한 투자성을 가지는 상품으로 운용 가능
- ☐ 중앙회는 신용예탁금의 운용에 따른 손익여부에 불구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할 수 있어 중앙회의 재부실 예방 가능

2. 대안의 발굴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3.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: 해당사항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8. 중앙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김 준
	담당부서(과)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정 완 규		연락처	02-2156-9859
	과장	신 진 창		이메일	zero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-		(규제 아님)	
	이해관계자	신용협동조합중앙회	1개	관계기관 협의, 입법예고 등	이견 없음
5. 규제 존속기한	- 규제 아님, 존속기한 없음				
6. 구분	- 규제 아님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신탁법시행령에서는 조합 및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, 그 근거가 되는 신탁법에서는 조합에 대하여만 부동산의 소유를 제한 - 조합에 적용되는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규정을 중앙회에도 준용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규제 아님 : 기존에 시행령 사항을 법에 근거 마련, 새로운 의무 등을 설정하지 않음
- 신탁법시행령에서는 조합 및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, 그 근거가 되는 신탁법에서는 조합에 대하여만 부동산의 소유를 제한
- 조합에 적용되는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규정을 중앙회에도 준용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78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~ ⑤ (생략)	제78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⑦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.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, 중앙회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함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중앙회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의 법률상 근거 마련

- 2. 대안의 발굴검토 : 해당사항 없음
- 3.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: 해당사항 없음
- 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: 해당사항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9. 중앙회에 대한 예탁금 등 대위변제청구권 소멸시효 단축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김 준
	담당부서/과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정 완 규		연락처	02-2156-9859
	과장	신 진 창		이메일	zero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-		(규제 아님)	
	이해관계자	신용협동조합중앙회	1개	관계기관 협의, 입법예고 등	이견 없음
5. 규제 존속기한	- 규제아님, 존속기한 없음				
6. 구분	- 규제아님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신탁중앙회에 대한 조합원의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며,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안내·통지가 시효충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규제 아님
- 1) 소멸시효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고, 채권의 성질에 따른 적절한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임. 소멸시효의 단축 및 연장이 규제의 강화 및 완화가 아님
- 2) 타 금융업권과 같이 신탁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함으로써,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, 배당이 불가능한 대위변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예금자보호기금의 손실이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규제완화가 아닌, 신탁을 지원하는 내용
- 신탁중앙회에 대한 조합원의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며,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안내·통지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80조의2(신탁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) ① ~ ⑤ (생략)	제80조의2(신탁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⑥ 제4항에 의한 조합원 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<신설>	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·통지 등은 제6항 및 「민법」 제168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타 금융업권(5년)과 신탁중앙회(10년)에 대한 대위변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상이하여 **예금자보호제도 전체의 통일성과 안전성 저해**
- 파산재단이 소멸*된 이후에는 신탁중앙회의 대위변제채권에 대한 배당이 불가**하여 **예금자보호기금이 추가적으로 소요**
 - * 파산재단은 파산일로부터 평균 5년 이내에 법적종결
 - ** 파산재단 법적종결 이후에 대위변제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,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도 동 금액에 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함
- 배당 등을 위해 파산재단이 장기간 운영될 경우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소멸시효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데, 예금자보호법, 농·수협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관련 법률에서는 대위변제청구권의 소멸시효를 **5년**으로 규정하고 있으나
- 신탁중앙회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**10년**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소멸시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타 예금자보호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소멸시효를 규정함으

로써 예금자보호제도 전체의 통일성 및 안전성 확보

- ☐ 배당이 불가능(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재단이 소멸)한 대
위변제를 최소화 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손실 최소화
- ☐ 예탁금 대위변제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로 파산
재단 운영비용 절감 및 중앙회 배당액 증가

2. 대안의 발굴 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3.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: 해당사항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10.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 개선 및 제재권한 위양 10. 파태료의 부과 징수 권한 금감원 위탁근거 마련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인자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김 준
	담당부서(과)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정 완 규		연락처	02-2156-9859
	과장	신 진 창		이메일	zero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-		(규제 아님)	
	이해관계자	신탁 등 상호금융기 관 및 각 기관 중앙 회 임직원		관계기관 협의, 입법예고 등	이견 없음
5. 규제존속기한	- 규제아님, 존속기한 없음				
6. 구분	- 규제아님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 임원에 대한 제재에 '문책경고', '주의적경고'를 추가하고 '견책'과 '경고'는 삭제 -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에 대한 조치요구는 감독원에게 위탁 - 파태료 부과·징수 권한 금감원 위탁 근거 마련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 임원에 대한 제재에 ‘문책경고’, ‘주의적경고’를 추가하고 ‘견책’과 ‘경고’는 삭제
 -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에 대한 조치요구는 감독원에게 위탁
- 금융감독원장(현행 금융위원회)이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84조(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)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·정관·규정에서 정한 절차·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1.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, 직무의 <u>정지 또는 견책</u> 2. (생략) 3. 임직원에 대한 <u>주의·경고</u>	제84조(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<u>정지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임원에 대한 <u>문책경고, 주의적 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</u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01조 (과태료)① ~ ③ (생략) <신설>	제101조 (과태료)① ~ ③ (생략) <u>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·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·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☐ (현황 및 문제점) 신탁법(§84①)은 임원에 대한 제재를 개선, 직무정지, 견책(금융위) 및 주의·경고(금감원장)로 구분하고 있으나,

신탁법 제84조 제1항 개정 연혁

-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금융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, 직무정지, 견책 조치권한 신설(1998.1.13. 전문개정)
- '임원에 대한 주의·경고' 조치권한 추가(2000.1.28 개정)

- **검사및제재규정**에는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로 해임권고, 직무정지, **문책경고**, **주의적경고**, 주의로 구분하고 견책은 직원에 대한 제재종류중 하나로 분류(임원의 주의적경고에 해당)
- * 신탁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에 대한 '견책'의 제재권자가 금융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상의 오류

- 규제 아님

- 1) 제재의 수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제재의 명칭 등을 타법,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변경하는 내용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☐ 입법상의 오류 개선 필요
- ☐ 과태료 수납 업무에 효율성 제고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☐ 타 법 및 **검사및제재규정** 등을 감안하여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등을 일치시킴

- 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·금감원 간 협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

- 2. 대안의 발굴검토 : 해당사항 없음
- 3.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: 해당사항 없음
- 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: 해당사항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자	이름	김 준
	담당부서(과)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정 완 규		연락처	02-2156-9859
	과장	신 진 창		이메일	zero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-		(규제 아님)	
	이해관계자	신협 등 상호금융기관	1개	관계기관 협의, 입법예고 등	이견 없음
5. 규제 존속기한	- 규제아님, 존속기한 없음				
6. 구분	- 규제아님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신협법상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--	--

-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- 신협법상 조합의 사업범위에 **외국환업무를 추가**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39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신용사업 가. ~ 나. (생략) 다. 내국환 라. ~ 아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제39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신용사업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</u> 라. ~ 아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**환전상** 또는 **외국환취급기관**으로 등록하여 **환전업**을 영위하고 있으며,
 - '16.3.22.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업무 중 ① **거주자와의 외국통화 표시 예금·대출업무**, ② **비거주자와의 예금·대출업무**도 추가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나
 - 실험법상 조합의 사업범위에는 **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** 할 필요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☐ 실험법상 조합의 사업범위에 **외국환업무를 명시하여 이를 명확히** 할 필요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☐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수정

2. 대안의 발굴 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: 해당사항 없음